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7~9.9)

1. 한국 정부의 국제여론전 관련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 NHK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각료회의에서 한국측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에 대해 비판하지 않은 것과 관련,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 협상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¹⁾
- o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제회의의 장을 이용하여 일본에 대한 비판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기도 하였음(NHK, 朝日新聞).²⁾
- * NHK는 “한국이 8월 북경에서 열린 RCEP 각료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유명회 통상교섭본부장이 또다시 (이 문제로) 각국 관료들에게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상 타결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는 점도 보도한 바 있음.³⁾
- 한편 NHK는 회의 전에 주최국인 태국 측이 “RCEP 협상 타결이 우선시되어야 할 때에 한일 문제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는 우려를 제기하는 등 경계감을 높이고 있었으며, 한국 측도 이러한 상황을 배려하였다고 논평함.

2.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 관련

□ [동향]

- 부산시(8월 29일)에 이어 서울시(9월 6일)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안을 가결함.⁴⁾

1) 「RCEP閣僚会合 韓国から輸出管理強化に対する批判出ず」 『NHK NEWS WEB』(2019. 9. 9).
2) 「韓国が再び日本批判も RCEP閣僚会合 交渉に影響か」 『NHK NEWS WEB』(2019. 9. 8). 및 「RCEP、妥結へ山場 電子商取引・知財で溝/日韓対立も、懸念材料 あすタイで閣僚会合」 『朝日新聞』(2019. 9.7).
3) 8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각료급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 “개방적이면서 규범에 근거한 무역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RCEP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철회를 요구함(NHK 보도).
4)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통과」 『부산 MBC』(2019. 8. 29) 및 「공무직 차별금지·대전범기업

○ 한국 근로자들을 강제징용에 동원한 일본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의 상품을 지자체 차원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을 노력의무로 규정한 조례이며, 파나소닉, 니콘 등 284개 기업이 전범기업으로 분류됨.

* 동 조례는 공공기관의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 구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한 인식표를 부착하여 전범기업 제품임을 드러내도록 규정함.

□ [일본 정부 동향]⁵⁾

- 스가(菅) 관방장관은 “(동 조례는) 일본의 특정 기업에 부당하게 비난함과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을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한국 측에는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동향에 주의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발언함.

○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와 관련, WTO 협정*과의 정합성 여부 등 조례의 위법성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함.⁶⁾

* 국내의 생산품의 무차별 원칙(WTO) : 일본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은 공공사업의 입찰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WTO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

- 한편 “한국의 현 정권이 이를 부추겨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일본 정부 관계자)”, “정치적 대립을 이유로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움직임은 무엇이란 말인가(외무성 간부)”라는 견해들도 존재함.⁷⁾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의 일부 언론은 서울시·부산시의 결정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연쇄적으로 보복조치를 발동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하였음(産経新聞).⁸⁾

구매제한 조례 서울시 의회 통과 『KBS NEWS』(2019. 9. 6).

5) 「日本の「戦犯企業」製品不買条例案可決 韓国 ソウル プサン」 『NHK NEWS WEB』(2019. 9. 6).

6) 「きしむ日韓：日本284社を「戦犯企業」 不買条例案可決 ソウル・釜山市議会」 『毎日新聞』(2019. 9. 7).

7) 「ソウルも「戦犯企業」可決 釜山に続き不買促す 韓国2市議会」 『静岡新聞』(2019. 9. 9).

-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2개 도시에서 조례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향후 전국으로 동 조례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
- 또한 현재 한국에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서울시·부산시의 조치가 이런 흐름에 편승한 것으로서 한일 양국의 국민 감정을 한층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됨.⁹⁾

□ [일본 기업 동향]

- 일본 기업들은 “당사가 지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며, 양국 정무간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미츠비시전기)”,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없지만, 왜 전범기업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카시마, 쿠마가이구미)”, “발언을 자제하려고 한다(미츠비시중공업)” 등 다양한 반응을 보임.¹⁰⁾

3. 고노 외무장관의 방위장관 임명 관련¹¹⁾

□ [일본 언론 동향]

- 아베 총리가 11일 개각시 이와야(岩屋) 현 방위장관 후임으로 고노(河野) 현 외무장관을 지명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 닛케이에는 고노 외무장관이 강제징용 배상문제,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계속 취해 왔기 때문에, 안보분야의 각료로 다시 임명함으로써 일본의 대한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목적도 있다고 보도함.

8) 「韓国、悪化する反日 不買条例 政府の動き 自治体追随」 『産経新聞』(2019. 9. 7).

9) 「日本製品の不買条例、ソウル・釜山市議会で可決、「強制労働284社は戦犯企業」。」 『日本経済新聞』(2019. 9. 7).

10) 「ソウルと釜山「戦犯」条例 日本企業、困惑の声」 『静岡新聞』(2019. 9. 7).

11) 「防衛相に河野氏、総務会長に鈴木五輪相。」 『日本経済新聞』(2019. 9. 9).